

도의회 교육위, 완산고 P교사 제기 의견 반박

“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 위법성 없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에 관련해 제기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충분히 적법성여부를 확인했다며,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완산고 P교사가 제기한 ‘새만금잼버리 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비는 153만원이며 전북연맹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김슬지 의원은 나머지 103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일 기준 전세계의 약 4만8,000명의 신청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청자는 천오백명이 인되는 상황이다”며 “내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례 발의 과정서 교육청 실무부서·서 교육감과도 협의 도교육청, 교육·학예 관장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당”

도의회 교육위 “의회 차원서 법적 조치·대응할 것”

비 지원은 부당하고 헌법 위반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일생에 단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회에서 전북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당연하다”라면서 “조례 발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실무부서, 서거석 교육감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했고 전북교육청 측에서도 조례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개진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학예를 관掌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

은 지방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 교육·학예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며 “교育재정을 새만금잼버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전북도청 소속 청소년의 교육·체험활동 촉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교육·학예에 관한 시행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아니다”면서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앞서 먼저 적용하라는 취지로 제정하는 법률이다.”고 말하며, 상위법을 적용했다는 등의 P교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슬지 의원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P교사가 폭언과 문자테러 등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일삼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전북도보·도 누리집서 오늘부터 27일까지 의견 수렴

답례품 선정 관련 사항·금융기관 위탁 사항 등 담겨

내달 도의회 임시회서 제출…올 연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 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을 외교 대재앙으로 평가하며,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미국 의회에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6명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번 불거진 외교 문제 등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의회에 직접 사과 입장문을 밝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도내 청소년에 지방의회 체험 기회 제공

김정기 도의원, 조례안 발의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여



끌어온 김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고,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이다.

조례인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의회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자를 선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근거조례 없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홍보는 물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을 통해 하거나, 도의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김경수 기자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도의회 최종 통과·‘눈앞’

윤수봉 도의원 대표발의

문건위서 원안 의결



써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고, 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 체육기반 사업 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35종목 63명의 전문체육지도자와 2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등의 상향을 통하여 안정적 체육지도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과 계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의 여건을 조건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체육인들의 체육기반과 전북체육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꿈꾸고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씻기



마스크착용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